

정책동향

산업자원부, 수출·입 관련 규제 완화

중고품 수입승인제가 폐지되고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16개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국내 기자재반출 확인제도 폐지 등 수출입관련 경쟁제한 규제가 대부분 풀리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소관규제 667개중 51.7%인 345개를 폐지하고 26.1%인 174개를 개선하는 등 총 77.8%인 519개를 연내에 정비키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부문의 경우 중고품 수입승인제가 폐지되고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16개로 줄며 국내 기자재반출 확인제도 폐지 등 수출입관련 경쟁제한 규제도 대부분 풀리게 된다.

또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군납에 관한 법률' 등 실효성이 없는 법률을 폐지키로 하는 등 무역관련 54개 규제중 33개를 폐지하고 13개를 개선, 총 46개를 금년내에 정비키로 했다.

산업·기술부문의 경우 업종합리화제도, 비업무용 토지의 강제매각 제도,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의 시설영업기준, 1종 전기용품제조업 등록제, 공산품 품질표시제도, 승강기 형식승인제 등을 폐지하고 공장설립승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련규제 217개중 150개를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광업권 투자

제한, 가스용품·용기 등의 수입신고제, 특정전기사업자제도 도입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제 323개를 연말까지 정비, 에너지 및 자원산업에도 외국인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규제정비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되도록 개별법 개정보다는 특별법을 제정, 일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가칭 '산업자원부 소관규제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산업자원부 '98년 규제정비계획

(단위 : %)

구분	무역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계
규제 수	54 (8.1)	217 (32.5)	396 (59.4)	667 (100)
폐지	33 (61.1)	114 (52.5)	198 (50.0)	345 (51.7)
개선	13 (24.1)	36 (16.6)	125 (31.6)	174 (26.1)
계	46 (85.2)	150 (69.1)	323 (81.6)	519 (77.8)

산업자원부,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1. 특정전기사업제도 도입

정부에서는 전력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제고를 위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수립하여 공청회를 거쳐 확정단계에 있으며 1차적으로 발전 및 배전 부문에 제한적인 경쟁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정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이 추진된 것이다.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있어 요금 등 공급조건이 인가제로 운용되는데 반하여 특정전기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공급 지점의 전기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사업이므로 요금 기타 공급 조건은 신고제로 운용된다. 또한 특정전기사업에 소요되는 전기의 부족이 생긴 경우, 한전이 그 특정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것과 그 공급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기탁송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특정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와 공급 지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일정한 탁송료를 부담하고 한전의 송배전선으로 활용하여 전기를 수송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특정전기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

한 기업이 전기공급의 외주(Out sourcing)를 통하여 전기설비를 외국 전력회사에 매각하고 발전전력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자유치도 기대된다.

2. 전기직공급 범위 확대

이번에 산업자원부는 발전사업자의 예외적 전기직공급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전기사업으로 간주하는 한편, 자가용 발전설비설치자가 계열기업 등 자본적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잉여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특정전기사업자 제도의 신설과 함께 배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계열기업간 발전설비 공동이용,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직공급 등으로 전력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전기공급에 필요한 전기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일반전기사업자로 부터 받은 전기를 재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핵심자본재 국산화 4조3,000억 지원 계획

정부는 기계류·부품·소재 등 핵심자본재 국산화를 위해 4조3천억원의 개발자금을 투입할 계

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회의실에서 핵심자본재 5개년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내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핵심자본재 교역규모의 5%인 4조3천억원을 투입, 핵심자본재의 국산화를 대폭 확대해 자본재 무역흑자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자본재 5개년계획에 따르면 그간 매년 생산기업에서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국산화 대상 품목을 발굴하던 방식이 국가나 수요기업 차원에서 일괄 발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발굴된 핵심자본재의 50%는 기업이 자체 개발자금으로 국산화토록 유도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정부가 5년간 1조5천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자본재 중소기업의 취약한 생산기반을 보완, 국산 개발된 자본재의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본재 신기술보급에 대한 산업기반기금 지원규모를 5년간 4,6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자본재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의 개발의뢰가 있는 경우나 수급기업 협력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를 우선 지원하는 등 새로운 국산화 개발방향과 지원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자본재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발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 하고 국산화 개발의욕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확보에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산화 추진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국산화 개발사업 평가와 관련,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는 평가전담제 채택하는 등 산학연 연계에 의한 기술지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테크노마트 개최, 자본재 수요기업의 역할 강화, 우수한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등으로 수급기업간 연계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보완해 연내에 핵심자본재를 고시하고 관련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환경경영 표준화사업 시행

산업자원부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0)에 부합한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환경무역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환경경영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경영 표준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 산업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36억원(정부지원 25억원)이 투입된다.

ISO 9000/14000 국내 민간 인정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포항종합제철 등 5개 참여업체와 아주대학교 등 3개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평가기술을 조기에 개발·보급, 국내 기업들의 환경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과 제품개발로 외국

제품과의 환경성 비교에서도 우위를 선점, 수출증 대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수출전문인력 지원 계획

중소기업청은 IMF체제 이후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상사 등에 근무하면서 많은 수출 경험을 쌓은 퇴직수출전문인력을 연인원 4,000명 규모로 확보, 내년 초부터 수출희망 중소기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소요예산 40억원을 '99 예산에 반영하였고, 오는 12월중 전문인력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들 전문인력은 단순히 수출 유경험자뿐만 아니라, 마케팅, 금융, 품질, 디자인 등 수출관련 제반분야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전문인력으로 중소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수출상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400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와 상품카다로그를 수록하여 운용중인 인터

넷 「중소기업관」을 내년말까지 8,600개 업체를 추가 총 10,000개 업체가 수록되도록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은 중소기업의 부담없이 전액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 영문번역 작업 등까지도 실업인력을 활용하여 제작·지원되는데, 이를 위하여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한편, 중진공이 운영중인 인터넷 「중소기업관」 이외에도 KOTRA(80개사), 무역협회(4,500개사) 등 수출지원 기관이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운영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를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수를 홍보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조개선자금, 기술혁신자금 등 재정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수출 중소기업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품질원, 아·태 7개국과 공인시험기관 상호인정 협정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국가별 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인 「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7개국 인정기구와 다자간 시험소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공인시험 검사기관인정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대표적인 국립기술품질원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APLAC 상호인정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에 통과, APLAC 7개국 인정기구와

다자간 MRA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81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분석능력과 시험성적서가 APLAC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7개국 5천4백여 시험소와 동등하게 대우받게 돼 수출전에 받던 시험, 검사비용과 시간절감에 따른 수출활성화가 기대된다.

품질원은 특히 정부기관인 품질원 KOLAS의

품질경영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공인시험기관들의 대외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수출업체 및 외국 바이어들에게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토록 독려하는 한편, 정부 및 산하 시험기관은 물론 민간 시험소들도 KOLAS의 인정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청, 재수출조건 관세면세 범위 확대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용 견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시험용 물품’에도 관세가 면세된다.

관세청은 재수출조건 면세대상물품 가운데 시험용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시행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되는 시험용 물품은 ‘당해물품의 수입당시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면세 혜택이 주어져 왔다.

예를 들어 고가의 반도체, LCD 생산장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수입하면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사전 검증을 위해 정식 수입전에 무상으로 시제품 장비를 수입해 수개월간 사용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성능시험에 사용된 장비는 외국으로 재수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관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고시로 시제품 장비를 수입해 판매용이 아닌 성능시험 목적의 제품을 생산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세를 받을 수 있다.